



KOTRA 워싱턴 D.C.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현안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화/목) 배포합니다.



📌 주요 내용

🎯 워싱턴 D.C. 포커스

- (세제) 美 행정부, OBBBA 이행을 위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예비 지침 발표 2
–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적용 관련, 금지 외국기관 및 물질적 지원 여부의 판정과 간소화 기준 제시

📊 경제통상 동향

- (조선업) 美 ‘미국 해양 행동계획(MAP)’ 발표...동맹국과의 협력 ‘브리지 전략’ 주목 4
- (관세) 현지 언론,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가능성 보도 5
- (산업) 美 전쟁부, 알리바바·바이두 등 펜타곤 블랙리스트에 등재 후 철회 6
- (통상) 트럼프 대통령,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등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7

⚖️ 의회법안 동향

- 비자, 관세, 투표권, 핵심광물 등 상·하원 발의 4건 8

💬 이시각 헤드라인

-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9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10

📅 워싱턴 D.C. 주요일정

2.18(수)	• 연준 1월 FOMC 회의록(Minutes of Fed's January FOMC meeting)
2.19(목)	• 12월 미 무역적자(U.S. trade deficit)
2.20(금)	• 4분기 경제성장률(GDP)
2.23(월)	• 연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설(Fed governor Christopher Waller speaks)

(세재) 美 행정부, OBBBA 이행을 위한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예비 지침 발표

1. 개 요

□ 美 재무부·국세청,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예비 지침(Notice 2026-15) 발표(2.12)

- 주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45Y·§48E·§45X) 적용 관련, 금지 외국기관(PFE) 및 물질적 지원 여부의 판정(MACR)과 간소화(Safe Harbor) 기준 제시
 - 예산조정법안(OBBBA, '25.7.4)에 따라 신설·강화된 우려 외국단체(FEOC) 및 금지 외국기관(PFE) 관련 제한 규정의 이행을 위해, 물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판정 기준 및 산정 방식(MACR) 체계 제시
- 동 지침은 PFE 관련 투자·공급망·계약 구조가 존재하는 경우, MACR 및 실질적 통제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적격성 판정·배제가 가능함을 규정
 - 적용 대상은 §45Y(청정전력 생산세액공제), §48E(청정전력 투자세액공제), §45X(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을 포함
 - 동 공지는 ① 금지 외국단체(PFE) 판정, ② '물질적 지원' 판단(MACR), ③ 간소화 규칙(Safe Harbor), ④ IP 라이선스 통제권(Effective Control) 해석 등으로 구성

2. 상 세

□ OBBBA에 따른 PFE·물질적 지원 제한 규정 신설

- 동 지침은 PFE 연계(조달·계약상 실질적 통제 포함) 여부가 세액공제 적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프로젝트·부품 단위 공급망 및 계약 점검 필요성 확대
- (1) 금지 외국 실체(PFE) 및 외국 영향 단체 판정 기준
 - PFE는 특정 외국단체 또는 외국 영향 단체로 구성되며, 외국 영향 단체는 지배구조 요건(임원 선임권·지분 25%/40%·부채 15%) 또는 전년도 지급과 계약상 실질적 통제(Effective control) 부여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할 경우 포함

• (2) ‘물질적 지원’ 판단 및 MACR 산정 체계

- PFE ‘물질적 지원’ 여부는 MACR*이 해당 연도 임계치(Threshold Percentage)를 충족하는지로 판정되며, 임계치 미만 시 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
- 임계치 적용기준은 §45Y·§48E(시설·저장기술)는 착공, §45X(적격부품)는 해당 과세연도 판매분으로 구분

〈2026년 MACR 임계치 및 적용 기준〉

구분	관련 법령	2026년 최소 MACR 기준	적용 기준
청정에너지 시설	§45Y / §48E	40% 이상	착공(Construction Begin) 기준
에너지저장기술(EST)	§48E	55% 이상	착공(Construction Begin) 기준
첨단제조 적격부품	§45X	50% 이상	판매(해당 과세연도) 기준

[자료: 미국 재무부(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3) 이행 편의를 위한 3대 간소화(Safe Harbor) 규정

- 항목 식별(Identification): MACR 산정대상을 Safe Harbor Tables 등재 항목으로 한정하고, 미등재 항목은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
- 비율 산정(Cost Percentage): 실제 원가 추적 대신 표의 지정비율(Assigned Cost Percentages)을 적용해 PFE 해당 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MACR 산정
- 공급업체 인증(Certification): 직접 공급업체 인증으로 PFE 생산·조달 여부 및 비용을 확인하되, 부정확성(reason to know) 확인 시 인증 적용이 제한

• (4) IP 라이선스·계약상 통제권(Effective Control) 관련 쟁점

- '25.7.4 이후 체결·변경된 IP 라이선스 계약에서 특정 외국단체에 대한 지급과 조달·운영·IP 제한 등 통제 요소가 확인되면, 해당 외국단체의 실질적 통제로 간주해 납세자를 외국 영향 단체로 판단할 수 있음.

- §45Y·§48E(착공) 및 §45X(판매) 관련하여 후속 제안 규정 또는 Safe Harbor 표·지침 공표 전까지 Notice 기준을 임시 적용하고, 각 공표 후 60일까지는 납세자가 현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정연호
■ 자료원	재무부(2.12), 블룸버그(2.17)

(조선업) 美 ‘미국 해양 행동계획(MAP)’ 발표…동맹국과의 협력 ‘브리지 전략’ 주목

- (개요) 백악관은 ‘미국 해양 행동계획(America’s Maritime Action Plan, MAP)’을 발표하고, 미국 해운·조선산업 재건을 국가 전략과제로 제시(‘26.2.13)
 - MAP는 미국이 전 세계 신규 상선의 1% 미만만을 자국에서 건조하고, 대형 상선 건조가 가능한 조선소가 제한된 현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군수·경제안보 리스크로 규정함.
 - MAP는 ‘25년 행정명령 및 백악관 팩트시트에서 제시된 진단을 바탕으로, 상선·군수선 건조능력, 조선소·부품 공급망, 항만 인프라, 해양 인력 등 ‘마리타임 산업기반(MIB)’ 전반의 회복을 위한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고 있음.
 - (상세) 조선소 투자·번영지대·브리지 전략을 결합한 해양·조선 재건 패키지 추진
 - MAP는 기존 행정명령에서 지시된 범정부 해양 행동계획의 이행 문서로, 국내 조선소 현대화, 조선·해운 공급망 다변화, 해양 인력 양성, 규제 완화, 안정적 수요 창출과 함께 동맹국과의 산업·투자 협력을 조선 재건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함.
 - 주요 조치로 ① 국내 상선·군수선 건조 능력 확대, ② 조선·해운 투자 인센티브 및 ‘마리타임 번영지대’ 지정, ③ 항만·물류 인프라 현대화, ④ 선원·조선 인력 교육·훈련 강화, ⑤ 미국 국적 상선·예비선대 확충 등 투·융자·인력·인프라 관련 패키지 포함
 - 아울러 다함정 계약에서 초기 물량을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하도록 허용하는 ‘브리지 전략(Bridge Strategy)’을 제안해, 단기적으로는 한국·일본 등 동맹국 조선소 설비를 활용하는 동시에 미국 조선소에 대한 직접투자를 병행해 장기적으로 건조 공정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온쇼어링 방식 제시
- * MAP 원문 Pillar I “Leverage International and Industry Partnerships” (7~8p) 참조
- ※ 미국 조선소 인수·지분 투자, 설비 현대화·기술 협력과 함께 정부 보증·세제 혜택, 다함정·장기 계약 등을 연계, 장기적으로 미국으로의 단계적 온쇼어링을 유도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2.13)(25.4.9), CSIS (25.4.10), 블룸버그(25.7.10)

(관세) 현지 언론,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가능성 보도

- (개요) 미 현지 언론,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 완화 검토 중 보도
 -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 관계자 정보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알루미늄 관세(50%) 일부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2.13)
- (상세) 정부는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아님을 강조, 업계는 관세 유지 필요 주장
 - 파이낸셜 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용품 가격 상승(식품·음료 캔 등)과 유권자들의 경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11월 중간선거를 고려*, 관세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
 - * Pew Research 여론조사(2.4)에서 미국인의 70% 이상이 경제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 52%는 트럼프 경제정책이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응답, 경제 부담이 정치적 리스크로 부상
 - 이와 관련,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은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 한 관세 변경은 없다며 해당 보도를 일축**
 - 베선트 재무장관은 동 보도와 관련, 일부 품목에 대한 기술적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관세 완화는 전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라고 강조(CNBC 인터뷰, 2.13)
 - 반면, 미 철강협회(AISI)는 중국 등 해외의 과잉 생산이 미국 안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하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유지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

▪ 작성자 | 워싱턴 D.C. 무역관 문현주

▪ 자료원 | 파이낸셜 타임스(2.13), 로이터(2.13), Pew Research Center(2.4)

(산업) 美 전쟁부, 알리바바·바이두 등 펜타곤 블랙리스트에 등재 후 철회

- (개요) 美 전쟁부,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 개정안 전격 철회...對중 전략 혼선 부각
 - 美 전쟁부가 2월 13일 국방수권법(NDAA) Section 1260H*에 따른 중국 군사기업 리스트 개정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한 직후, 별도 설명 없이 비공개로 전환
 - * Section 1260H는 2021 회계연도 NDAA(William M. Thornberry 국방수권법, 공법 116-283)에 신설된 조항으로, 전쟁부가 중국 군사 기업 목록을 연간 공표하도록 요구
 - 동 조치로 중국 기술·전기차 종목의 주가가 하락, 알리바바 ADR은 장중 최대 5% 내외, 바이두 ADR 최대 4.5% 급락 후 철회 소식에 낙폭을 일부 만회
- (상세) 블랙리스트 철회는 정상회담 앞 전략적 조치·행정부 내 혼선 분석
 - 이번 개정안에는 알리바바(전자상거래·AI), 바이두(AI·인터넷), 전기차 업체 BYD, 우시 엠텍(바이오), 로보센스(AI 로봇틱스), 티피링크(네트워크 장비) 등이 신규 등재되고,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YMTC)와 창신메모리(CXMT)는 리스트에서 제외
 - * Section 1260H 리스트(2021 NDAA 의무화), 134개에서 154개 확대 시도
 - 블룸버그는 동 리스트가 4월 미-중 정상회담을 수주 앞둔 시점에 게재된 점에 주목, 전문가들은 무역 협상 안정과 동시에 안보 압박을 지속하는 의도적 전략으로 해석
 - 한편, 이번 철회는 중국 통신사 운영 제한, 데이터센터 장비 규제 등 대중 기술 안보 조치 발표 다음 날 발생, 베이징 협상 기조 유지용이라는 분석이 제기, 해당 기업들은 군사 연계성을 부인하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
 - 정치 분석가들은 알리바바·바이두·텐센트 등 중국 3대 AI 기업이 모두 군사 기업으로 지목된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엔비디아 AI 칩 판매 허용 여부를 동시에 검토 중인 점을 지적하고, 행정부 내 對중 정책의 이견을 반영한다고 분석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James Lee
▪ 자료원	블룸버그(2.13), (2.15), 로이터(2.13)

(통상) 트럼프 대통령,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등 일본의 첫 대미 투자 프로젝트 발표

- (개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게시를 통해 美·日 무역협정 5,500억 달러 투자펀드의 첫 프로젝트를 발표 ('26.2.17)
 - 美 상무장관 러트닉과 日 경제산업상 아카자와의 최근 워싱턴 회의 결과로, 오하이오 가스발전소, 조지아 임계광물 부지, 텍사스 LNG 시설 등에 우선 배정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25년 美·日 관세협정(자동차 등 15% 관세 적용)의 핵심 성과인 투자펀드 이행 조치로 언급
- (상세) 美 트럼프 대통령 주도 투자위원회 추천 프로젝트...펀드 자금은 대출 보증 위주
 - 첫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위원회 추천과 일본 측 의견을 바탕으로 선정하고, 일본은 선정 후 45영업일 내 자금 지원(직접투자 1~2%, 대출·보증 중심) 의무를 지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일본수출입보험공사(NEXI)가 주도할 예정 (블룸버그)
 - 트럼프 대통령은 “이 규모의 프로젝트는 관세(TARIFFS) 없이는 불가능”이라고 강조하며, 3.19 예정된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펀드 확대 논의를 예상

▪ 작성자	워싱턴 D.C. 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TRUTH (2.17), 블룸버그(2.17)

의회법안 동향

구분 (현행일)	법안 (발의일)	대표 발의자	법안 및 주요 내용
H2A 비자 (2.12)	H.R.7541 (하) (2.12)	Pramila Jayapal (민)	〈H-2A 임시근로자 프로그램 연간 제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H-2A 임시 외국인 농업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매년 고용할 수 있는 인원·규모 등에 제한을 두어 미국 국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관세 (2.12)	H.R.7557 (하) (2.12)	Linda Sanchez (민)	〈NATO 동맹국 존중법(Respect NATO Allies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TO 동맹국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관세율할당량(TRQ) 등의 부과 또는 변경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
미 투표권 (2.12)	S.1383 (상) (25.04.09)	Rick Scott (공)	〈미국 유권자 자격 보호법(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 상·하원(H.R.22) 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방선거 등 등록 시 미국 시민권 증명서류(사진ID 포함)를 의무화하고, 이를 즉시 시행하는 포괄적 법안
핵심광물 (2.12)	S.2860 (상) (2.12)	Tim Sheehy (공)	〈미국 해양 핵심광물 우위 회복법(Revitaliz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Dominance Act)〉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양 심해 광물 자원 개발을 가속화하고, 핵심광물 국내 공급망 강화를 통해 외국 의존도를 줄이며, 국제 파트너십 확대와 연방 허가·매핑 절차 간소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안보·경제 경쟁력 강화 법

* 미국 동부 시간 2월 17일 15시 모니터링 기준

현지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The Wall Street Journal	<u>Japan Plans \$36 Billion in U.S. Investments Under Trump Administration Deal</u> (일본, 트럼프 행정부 합의에 따라 미국에 360억 달러 투자 계획)
	미 상무부에 따르면 일본은 총 5,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무역 투자 합의에 포함된 조치로, 핵심 광물과 석유, 가스, 인프라, 전력 생산 분야에 약 3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
The Washington Post	<u>Jesse Jackson, a leading voice for civil rights, dies at 84</u> (미국 민권 운동의 대표 지도자 제시 잭슨, 84세로 별세)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 기반을 처음 확보한 정치인이자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 암살 이후 흑인인권 운동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동한 제시 잭슨 목사, 84세로 별세
The New York Times	<u>Trump Sought Vast Budget Cuts. Congress Granted Few</u> (트럼프 대규모 예산 삭감 시도, 의회에서 막혀)
	미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규모 예산 삭감안 가운데 상당수를 조직적으로 배제, 백악관이 삭감하고자 한 연방 정부의 교육, 보건, 주택, 연구 프로그램 상당수 그대로 유지
CNN	<u>Man arrested after charging Capitol building with loaded shotgun, police say</u> (장전된 총기 들고 연방 의사당 건물로 돌진한 남성 체포)
	전술 조끼를 착용하고 장전된 산탄총을 든 채 미 연방 의사당으로 돌진한 18세 남성이 화요일 신속히 체포됐다고 미 의사당 경찰이 밝혀
Reuters	<u>US dollar may be due for a reprieve after a four-month decline</u> (달러화, 4개월의 하락세 이후 반등 예상)
	정치·경제적 환경이 달러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고, 일부 시장 분석가들도 달러 강세 전망으로 돌아서면서 달러화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 제시

* 미국 동부 시간 2월 17일 16시 기준

워싱턴 D.C. 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6-05	트럼프 정부의 IEEPA 관세 대안으로 수입 면허제 활용 가능성 검토	2026.2월
US26-04	트럼프 행정부 출범 1주년 경제·통상 성과 및 현지 평가	2026.2월
US26-03	2026년 주요 통상 일정과 미국 통상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6-02	유엔과 세계은행이 전망한 2026년 세계 경제 및 정책 제언	2026.1월
US26-01	2026년 글로벌 핵심 리스크와 미국 정책 환경 변화 전망	2026.1월
US25-51	골드만삭스 2026년 세계경제 전망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50	美 2026 국방수권법(NDAA)로 살펴본 미국 국방정책 방향	2025.12월
US25-49	미·중 경제안보 검토 위원회(USCC) 의회 연례 보고서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8	워싱턴 국제무역협회 'Trade & Tech Summit' 내용 및 시사점	2025.12월
US25-47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싼 미국의 인식 전환과 통상 질서 변화	2025.12월
US25-46	2026년 USMCA 공동재검토 주요 일정 및 3국 입장과 현지 평가	2025.12월
US25-45	2025년 백악관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 특이점과 경제무역 함의	2025.12월
US25-44	美-中 반도체 디커플링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	2025.12월
US25-43	트럼프 정부, 미국형 소버린 AI 구축을 위한 『제네시스 미션』 출범	2025.12월
US25-42	美 연방 대법원 IEEPA 관세 재판 동향 및 트럼프 관세 플랜 B 전망	2025.11월
US25-41	美 연방정부 섯다운 종료 및 예산 합의 관련 주요 동향	2025.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 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사-26 (2026.2.6.)		
코인사-25 (2026.1.24.)		

문의	이메일	전화
	jwshim@kotra.or.kr	
	shim.nature@kotra.or.kr	
		+1) 202-857-7919